

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기획재정부, 2021. 1

-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「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」 책자*를 발간함
 - * '97년도부터 매년 2회(1월, 7월)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·제도 등을 정리·발간하여 지자체, 공공기관, 도서관 등에 배포
 -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(부·처·청·위원회)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·시기·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되었음
 - 특히, 금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음
-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 - (세제·금융) 통합투자세액 공제* 신설,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**,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확대(4,800 → 8,000만원 미만) 등
 - *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,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 - **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 적용 →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(위반시 강한 제재)
 - (교육·보육·가족)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,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*, 보조·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**,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(연720 → 연840시간) 등
 - * (초) 206 → 286천원/ (중) 295 → 376천원/ (고) 422 → 448천원
 - ** 보조교사 2.7 → 2.8만명 / 연장보육교사 2.5 → 3만명
 - (보건·복지·고용) 기초연금 지급 확대(소득하위 40% → 70%이하),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*,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**,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,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(1,014 → 1,078개 질환) 등
 - *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
 - **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함께 제공
 - (행정·안전·질서)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, 맹견*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, 「정부24」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
 - * 도사견, 아메리칸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
 - (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)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*, 공동주택·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,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, 5G급 Wi-Fi 비면허 주파수 공급** 등



- * 지원 대상기업: 중소기업 →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 - ** 기존 2.4GHz, 5GHz 대역에서 사용중인 Wi-Fi 주파수를 6GHz 대역으로 확대
 - (국방·병무) 병 봉급 연차적 인상*,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** 등
 - * '17년 최저임금의 40%(‘20년) → 45%(‘21년) → 50%(‘22년)
 - ** 고교 중퇴 이하 1~3급 : 보충역 → 학력 구분 없이 1~3급 : 현역
 - (농림·축산·식품)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*, 농촌에서 미리 알아보기 지원,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,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% 감면
 - * 1일 인건비 7만원(국비70%, 농가부담30%) → 8만원(국비70%, 농가부담30%)
 - (환경·기상)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·공개*, 1시간 단위 단기에보 등 상세 예보 제공,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
 - *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
-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, 공공 도서관, 점자 도서관 등에 12,000여권이 배포·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.
- 12월 28일(월) 10: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정책>정책자료>발간물)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
 - 1월 초 '이렇게 달라집니다' 반응형 웹페이지*(<http://whatsnew.moef.go.kr>)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함
 - * 스마트폰, 태블릿,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자동으로 화면이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페이지
- 특히,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, 트위터,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,
-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함.

참 고

시기별 주요 제도변경 내용

(1월)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, 조특법 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,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,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,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제도 개선, 기초연금 지급 확대,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,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,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,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,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,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,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%감면, 병(兵) 봉급의 연차적 인상,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,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,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등

- (2월)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(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),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,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등
- (3월)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,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, 농촌에서 미리 살아가기 지원, 수산 공익직불제도 시행 등
- (4월) 「정부24」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,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, 지하철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, 공동주택·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,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등
- (5월)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·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,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단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등
- (6월) 유턴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지원,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,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등

기획재정부

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

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·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·재설계하여 '통합투자세액공제'를 신설하였습니다

현 행	개 정
① R&D 설비(1/3/7) ② 생산성 향상 시설(1/3/7)* * 단, 대기업은 '20년 2%, 중견·중소기업은 '20~'21년까지 5%, 10% 적용 ③ 안전 설비(1/5/10) ④ 에너지절약 시설(1/3/7) ⑤ 환경보전 시설(3/5/10) ⑥ 초연결(5G) 네트워크 시설(최대 3)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(1/3/6)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(5/7/10)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(3/5/10) ⑩ 중소·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(0/2/3) ※ 괄호 : 대/중견/중소기업 공제율 (%)	<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> • (공제대상)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(단, 토지·건물, 차량, 비품 등 제외) • (공제방식) 기본공제(당해연도 투자액) + 추가공제(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) - 기본공제율 : 대기업 1%, 중견 3%, 중소 10% - 추가공제율 : 모든기업 3% • (신산업 지원 강화)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%p 우대 - 공제율 : 대기업 3%, 중견 5%, 중소 12% ※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('20·'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)

■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



였습니다.

* 단, 토지·건물, 차량,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

■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함으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.

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·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* 단, '20·'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

○ 추진배경 :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

○ 주요내용 :

-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·재설계
- 세제지원 대상자산의 확대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-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 적용

○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·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* 단, '20·'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

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

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.

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,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.

과세표준	일반			3주택 이상+조정대상지역 2주택		
	현행(%)	개정(%)	법인	현행(%)	개정(%)	법인
3억원 이하	0.5	0.6	3.0	0.6	1.2	6.0
3~6억원	0.7	0.8		0.9	1.6	
6~12억원	1.0	1.2		1.3	2.2	
12~50억원	1.4	1.6		1.8	3.6	
50~94억원	2.0	2.2		2.5	5.0	
94억원 초과	2.7	3.0		3.2	6.0	

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*을 200%에서 300%로 인상하였고, 법인에 대한 세부담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.

*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「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」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

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* 산정시 기본공제(6억원)를 폐지하였습니다.

* (주택공시가격의 합계 - 6억원) x 공정시장가액비율('21년 95%)

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(구간별 +10%p ↑) 및 합산공제율* 한도(70→80%)를 상향하였습니다.

*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= 고령자 공제율 + 장기보유 공제율

연 령	고령자 공제		장기보유 공제(현행 유지)	
	공제율(%)		보유기간	공제율(%)
	현 행	개 정		
60~65세	10	20	5~10년	20
65~70세	20	30	10~15년	40
70세 이상	30	40	15년 이상	50

○ 추진배경 : 주택시장 안정화

○ 주요내용 :

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

– 현행 : (일반) 0.5~2.7%, (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) 0.6~3.2%

– 개정 : (일반) 0.6~3.0%, (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) 1.2~6.0%, (법인) 3.0%, 6.0%

• 세 부담 상한 인상

– 현행 : (조정대상지역 2주택) 200%

– 개정 : (조정대상지역 2주택) 300%, (법인) 세 부담 상한 폐지

•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폐지

– 현행 : (주택공시가격의 합계-6억원) x 공정시장가액비율('20년 90%)

– 개정 : (법인) :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x 공정시장가액비율('21년 95%)

•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 상향

– 현행 : (고령자 공제) 10~30%, (합산공제율 한도) 70%

– 개정 : (고령자 공제) 20~40%, (합산공제율 한도) 80%

○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

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.

① 1세대 1주택(실거래가 9억 원 초과)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하였습니다.

– 보유기간 연 8%였던 공제율은 '21.1.1.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「보유기간 4% + 거주기간 4%」로 조정됩니다.



기간(년)		3~4	4~5	5~6	6~7	7~8	8~9	9~10	10년 이상
현행 (%)	보유	24	32	40	48	56	64	72	80
	보유	12	16	20	24	28	32	36	40
개정 (%)	거주	12*	16	20	24	28	32	36	40
	합계	24	32	40	48	56	64	72	80

*보유기간 3~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~3년인 경우 8%

-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(조합원입주권·분양권 포함)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인상되어 '21.6.1.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.
 - (단기) 1년 미만: 40% → 70%, 1~2년*: 기본세율 → 60%
 - *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%의 중과세율이 적용
 - (다주택) [현행] 기본세율 + 10%p(2주택) 또는 20%p(3주택 이상) [개정] 기본세율 + 20%p(2주택) 또는 30%p(3주택 이상)
- ③ '21.1.1.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·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.
- ④ '21.1.1.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(10~25%)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→20%로 인상됩니다.
 -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(조합원입주권, 분양권)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 세율 적용됩니다.

○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

○ 주요내용

-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
-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(조합원입주권, 분양권 포함)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
 - 현행 : (1년 미만) 40%, (2년 미만) 기본세율
 - 개정 : (1년 미만) 70%, (2년 미만) 60%
-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
 - 현행 : (1세대 2주택) 기본세율 + 10%p, (1세대 3주택) 기본세율 + 20%p
 - 개정 : (1세대 2주택) 기본세율 + 20%p, (1세대 3주택) 기본세율 + 30%p
- ④ '21.1.1.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,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
-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(10→20%)

○ 시행일

- ①, ⑤ : '21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- ②, ③ : '21.6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- ④ : '21.1.1.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됩니다.

- (현행)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,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* 이월하여 공제

* (예외) ①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: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, R&D비용 세액공제 10년
② 모든 기업 : 신성장원천기술 R&D비용 세액공제 10년

- (개정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(5~10년)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

- ①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②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

-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
- 주요내용 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
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

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.

- 현재 연매출(공급대가) 4,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,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.

* '20년 연매출이 8,000만원 미만이며,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'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

*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형장소는 현행 4,800만원 기준 유지

- 다만,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(연매출 4,800만원 이상)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.

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,000만원 미만에서 4,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.



* 간이과세자로서 '21년 매출이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적용

- 추진배경 :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
- 주요내용
 - 간이과세 기준금액 : 연매출(공급대가) 4,800만원 → 8,000만원 미만
 - 납부면제 기준금액 : 연매출(공급대가) 3,000만원 → 4,800만원 미만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(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)

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

조미용 주류를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
-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하여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*가 「주세법」 상 내년부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므로 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
*「주세법」상 기타주류로 분류, 주세(출고가의 10%)와 교육세(주세액의 10%) 부과

- 또한,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·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규제*의 적용도 배제됩니다.

* (예) 주류 제조·판매 시 면허 취득 필요,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 가능,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

-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조미용 주류 생산 활성화 및 소비자 가격 인하
- 주요내용 : 주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(OEM) 허용

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(OEM)를 허용하였습니다.

-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*가 허용됩니다.

* 「주세법」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

-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주류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
- 주요내용 :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(OEM) 허용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

연초의 뿌리·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.

- 그동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*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나, 내년부터 연초의 뿌리·줄기 등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.

*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

-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담배에 대한 과세사각 방지
- 주요내용 :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의 범위 확대
 - 기존 :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
 - 개정 :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

거래질서 확립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계산서 발급·수취의무 및 (세금)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.

■ 현행대상

- 복식부기의무자

■ 확대대상

-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·수취한 비사업자*

* 사업자로 의제·등록 후 가산세 부과

- 간편장부 대상자

- 단, ①신규사업자,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,800만원 미달자, ③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, 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

-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·용역을 공급하지



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세입기반 확충
- 주요내용 :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에 비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추가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

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됩니다.

■ 적용대상 : 성실신고확인대상자, 전문직 업종* 사업자

*변호사업, 회계사업, 변리사업, 세무사업, 의료업, 수의사업, 약국업 등

■ 대상차량 :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

■ 전용특약 : 사업자,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

■ 미가입시 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%만 필요경비 인정

*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: (미가입기간) 50%, (가입기간) 100%

■ 보험가입 간주 : 차량대여업자(리스제외)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

－ 계약기간 30일 이내

－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
- 주요내용 :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

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.

■ 현행 의무발급 대상

- 변호사 등 전문직, 병·의원, 약사업, 수의사업, 일반교습학원, 가구소매업, 골프장운영업,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

■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

-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, 독서실운영업, 두발 미용업,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, 신발소매업,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, 의복 소매업, 컴퓨터 및 주변장치·소프트웨어 소매업,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
- 전자상거래 소매업
 - 단, 현행 의무발급 대상(77개 업종)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(9개업종)에서 공급하는 재화·용역의 공급분에 한정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
- 주요내용 :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두발 미용업 등 9개업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소득세 최고세율 조정

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(Solidarity)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,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(42% → 45%)하였습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
- 주요내용 :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45%로 조정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

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·유형에



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하였습니다.

- (현행)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수익자에게 소득세 과세
- 단,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과세

■ (개정)

유 형	납세의무자	대상 신탁	과세방식
수익자 과세	수익자	원칙(일반적인 경우)	소득원천별 과세
위탁자 과세	위탁자	실질적 수익자가 위탁자인 경우 * 수익자가 없는 경우,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·지배하는 경우 등	소득원천별 과세
신탁재산 법인세 과세	1단계: 신탁재산 2단계: 수익자	수익증권발행신탁, 목적신탁 등 중 수탁자가 선택하는 경우(위탁자가 통제·지배하는 경우 제외)	2단계 과세 1)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 2)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 * 既납부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
- 주요내용 :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

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서민·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
- 주요내용 :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분양권 가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

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

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제도*가 1년간 한시 적용됩니다.

* 기준내용연수의 50%(대기업)·75%(중견·중소기업)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

■ 현행

－ 대상자산 : 2018.7.1.~2020.6.30. 취득한 다음의 자산

① 중소·중견기업 → 설비투자 자산* 전체

* 기계 및 장치, 공구, 기구, 비품차량 및 운반구, 선박 및 항공기(운수업·임대업 등에 직접사용 되는 경우 한정)

② 대기업 → 혁신성장 투자자산*

* R&D설비,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,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('19.7.3~'20.6.30. 취득분)

■ 개정 : 적용기한 한시 적용('21.1.1.~'21.12.31. 취득분)

- 추진배경 :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
- 주요내용 :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('21년 취득분)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벤처캐피탈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

특화선도기업*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.

*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3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

■ 적용요건 :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

■ 취득방식 : 기업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,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,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,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

■ 적용기한 : '21.1.1~'22.12.31.까지 출자 등 취득분

- 추진배경 : 유망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
- 주요내용 :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신설


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~ 2022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등 취득분

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

투자 유도를 강화하되,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.

■ 재설계

- ①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(65%→70%)
- ② 상시근로자 임금증가 대상 확대 (총급여 7,000만원→8,000만원)
- ③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(1년→2년)

■ 적용기한 연장 : '20.12.31 → '22.12.31.

■ 적용시기

- (기업소득·임금증가)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- (초과환류액 이월) '21.1.1.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
- 추진배경 :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
- 주요내용 : 기업소득 비중 조정, 임금증가 대상 및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

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

자금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화하였습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
- 주요내용 : 자금 대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

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

사립 초·중·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의무* 면제하였습니다.

* 법인의 자금부담 분산 및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초·중·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
- 주요내용 :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

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
■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,

* 국내·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내산출세액이 없거나, 국외원천 소득이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성이 축소될 우려를 해소

■ 이월공제기간(10년)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종전 이월공제기간(5년)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
- 주요내용
 -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
 - 이월공제기간(10년)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(필요경비)으로 산입가능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종전 이월공제기간(5년)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
증권거래세율 인하

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합니다.

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



증권거래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

구분	현행	'21 ~ '22년	'23년
코스피*	0.1%	0.08%	0%
코스닥	0.25%	0.23%	0.15%
코넥스	0.1%	0.1%	0.1%
기 타	0.45%	0.43%	0.35%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
- 주요내용 :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
 - 현행 : (코스피) 0.1%*, (코스닥) 0.25%, (코넥스) 0.1%, (비상장·장외거래) 0.45%
 - * 농어촌특별세 0.15% 별도
 - 개정 : (코스피) 0.08%*, (코스닥) 0.23%, (코넥스) 0.1%, (비상장·장외거래) 0.43%
 - * 농어촌특별세는 0.15% 현행 유지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

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

사회간접자본(SOC)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■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(1억원 한도)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%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.

■ 동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됩니다

- 추진배경 : 사회간접자본(SOC) 투자 활성화 지원
- 주요내용 :
 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
 - 투자금액 1억 원, 14% 세율 분리과세
 - (적용기한) '22.12.31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

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■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(2억원 한도)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%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.

■ 동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지원
- 주요내용 :
 -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
 - 투자금액 2억 원, 9% 세율 분리과세
 - (적용기한) '22.12.31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전면 개편

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 확대, 주식투자 허용,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.

■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(근로소득 있는 15세~18세 거주자)로 확대하였습니다.

■ 자산운용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습니다.

■ 계약기간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였습니다.

■ 투자금 납입한도를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이월하는 것을 허용*하였습니다.

*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= 2천만 원 × [1+계약기간 경과연수(최대 4년)]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·연장·해지분부터 적용(기존 가입자 포함)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ISA 가입 활성화
- 주요내용
 - (가입대상 확대) 소득이 있는 자, 농어민 → 19세 이상 거주자*
 - * 15~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
 - (자산 운용범위 확대) 예·적금, 집합투자증권 등 → 상장주식 추가
 - (계약기간 탄력성 부여) 5년(단축 또는 연장 불가) →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



율적으로 설정(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)

- (납입한도* 이월 허용)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** 허용

* 연 2천만 원, 최대 1억 원

** (예)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 원
(이월 1천만 원 + 2천만 원)

- (적용기한 폐지)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

○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

화주 등의 권리 강화를 위해 통관보류에 대한 통지, 소명절차 등 권리보호절차를 명확화 하였습니다.

- 현행 관세법상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화주 등의 권리강화를 위해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, 개선하였습니다.

- 통관보류 이후 화주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절차를 명확화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.

-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
- 주요내용 : 통관보류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 세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 요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절차를 명확히 함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

수출기업 등 산업지원을 위해 재수출감면 대상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.

- 현재 관세법 제98조에 의한 재수출감면 대상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된 수입에 한정되어,

- 수출기업이 납품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 계약형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.

* 임대차계약, 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물품 → 일반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물품도 추가

■ 동 개정으로, 국내기업이 해외구매자와 납품계약 시 구매자가 제공하는(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) 특정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 적용이 가능해집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수출기업 등 지원으로 과세형평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
- 주요내용 :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감면 허용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

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(3년)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
■ 현행 제도는 유효기간(3년) 경과시 사전심사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,

■ 품목분류 사전심사, 재심사 또는 변경결정건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변경 또는 재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확대 하였습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유효기간 경과건의 효력상실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납세자·과세관청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(예 : 유효기간 경과 후 품목분류 결정이 변경(저세율→고세율)된 건에 대한 불합리한 추징 발생 우려)만 가중될 가능성
- 주요내용 :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
 - 3년 ⇒ 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 심사결과 계속 유효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

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에 대하여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저율관세(3%)를 부과합니다.

■ 유량조절기는 기체 또는 액체의 공급라인에서 투입량을 일정하게 제어해주는 기기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체를 미량으로 조절해주어 증착장비나 건식식각 장비에 필



수적으로 적용되는 부품입니다.

-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유량조절기가 액압식·공기압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3%,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8%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- '21년부터는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(3%)를 부과하도록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개정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됩니다.
 - 추진배경 :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가 작동방식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문제점
 -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유량조절기 : 관세 3%
 - 전기식의 유량조절기 : 관세 8%
 - 주요내용 :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(3%)를 부과하여 과세형평 제고
 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국세청

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

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"직전기(6개월)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"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·납부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.

- 예정신고·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/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하게 됩니다.
- 개정내용은 '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('21년 4월 예정고지부터) 적용됩니다.
 - 추진배경 :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
 - 주요내용 :
 - 기존 매년 4월·10월에 하던 예정신고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하도록 법령 개정*

- *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('19.12.31. 개정),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('20.2.11. 개정)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

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

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됩니다.

-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하였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국세청(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)으로 이관됩니다.
- 법정기부금단체(한국학교, 전문모금기관) 추천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
- 주요내용 :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)
 - 종전 : (신청) 비영리법인 등 → (추천) 주무관청 → (지정) 기획재정부
 - 개정 : (신청) 비영리법인 등 → (추천) 국 세 청 → (지정) 기획재정부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

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

1세대1주택자,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*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.

- * 「주택법」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(매매·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)
-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.
- 추진배경 :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
- 주요내용 : 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



1세대 1주택(고가주택)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

'21.1.1.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.

- 최소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(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)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%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, 보유기간 4%+거주기간 4%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.

기간(년)		3년~	4년~	5년~	6년~	7년~	8년~	9년~	10년이상
현행(%)	보유	24	32	40	48	56	64	72	80
개정(%)	보유	12	16	20	24	28	32	36	40
	거주	12(8*)	16	20	24	28	32	36	40
	합계	24(20*)	32	40	48	56	64	72	80

* 보유기간이 3년 이상(12%)이고 거주기간이 2년~3년(8%)인 경우 20% 적용

- 추진배경 :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
- 주요내용 : 1세대 1주택(고가주택)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8%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보유기간 4%+거주기간 4%로 조정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

상속세 전자신고 도입

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합니다.

- 인구 고령화 심화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*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하고자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를 도입합니다.

* 상속세 신고인원 : ('15)5,452명 ('16)6,217명 ('17)6,970명 ('18)8,449명 ('19)9,555명

-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,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.

- 또한,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, 한눈에 상속·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.

-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'20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, 시범운행을 거쳐 '21년 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.

- 추진배경 : 상속세 신고인원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

- 주요내용
 - 상속세 신고서식의 입력·조회·출력·파일변환이 가능한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
 - 상속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포털 구축
- 시행일 : 2021년 2월 예정

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

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홀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기존에는 홀벌이 가구의 범위에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었으나,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.
 - 현행 :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- 개정 :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.

- 추진배경 : 홀벌이 가구 범위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
- 주요내용 : (홀벌이 가구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구
 -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
 -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
 -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
※ 다만, 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고용노동부

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

'21.1.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.

-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「취업지원 서비스」와 「생계지원」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.
-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(50만원×6개월)이 결합 제공하는 I 유형과,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*으로 제공하는 II유형으로 운영됩니다.



*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

〈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〉

필요요건		연령	소득	재산	취업경험
Ⅰ 유형	요건 심사형	15~69세	중위소득 50% 이하	3억원 이하	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	선발형		중위소득 50% 이하(청년특례: 120% ↓)	3억원 이하(청년특례 별도규정)	X
Ⅱ 유형			중위소득 100% 이하(청년은 별도 정함)	X	X

○ 추진배경 :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"한국형 실업부조 도입" 추진*

* 국정과제 선정('17.5) → 경사노췌 합의('18.8,'19.3) → 「국민취업지원 제도 추진방안」 일자리췌 의결('19.6)

○ 근거법률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('20.6.9.제정)

○ 주요내용 :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

○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예술인 고용보험 적용

'20.12.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.

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〈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〉

구분		근로자	예술인
1. 적용범위			
적용대상		근로자(일용근로자 포함)	예술인(단기예술인 포함)
주요 적용제외		주 15시간 미만자(단,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)	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자(단, 소득합산 신청 으로 50만원 이상시 적용)
		65세 이후 신규자 등	(좌동)
2. 보험료 징수			
보험료율		실업급여 1.6% 고용안정·직업능력 0.25~0.85%	실업급여 1.6% 고용안정·직업능력 미적용
수급요건	기여요건	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	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 간 9개월 이상
	주요 이직사유	비자발적 이직	비자발적 이직(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)

지급수준	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 직급여 기초일액의 60%	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%
지급기간	120~270일	(좌동)
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	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	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 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
4. 출산전후(휴가)급여 지급		
기여요건	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	출산(유산·사산)일 직전 피보험단위 기간 3개월 충족
지급수준	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%	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%
지급기간	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일부(우선지 원:90일, 대규모:30일)	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

- 추진배경 :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및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
- 주요내용 :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
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
- 시행일 : 2020년 12월 10일

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

'21.1.1.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,094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

■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(월)을 곱하
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데,*

* 정부(공무원부문):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

정부(비공무원부문) 및 민간기업: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

■ '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,078천원이었으나,

■ '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,094천원으로 인상·적용합니다

장애인 고용률	2020년	2021년
고용의무이행률이 3/4이상	월 1,078,000원(부담기초액)	월 1,094,000원(부담기초액)
고용의무이행률이 1/2이상~3/4미만	월 1,142,680원	월 1,159,640원
고용의무이행률이 1/4이상~1/2미만	월 1,293,600원	월 1,312,800원
고용의무이행률이 1/4미만	월 1,509,200원	월 1,531,600원
장애인 미고용	월 1,795,310원(최저임금액)	월 1,822,480원(최저임금액)



- 추진배경 :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
- 주요내용 : 부담기초액 상향
 - 현행 : 1,078,000원~1,795,310원(5단계)
 - 개정 : 1,094,000원~1,822,480원(5단계)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·납부

'21.1.1.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·납부 하여야 합니다.

■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,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

■ '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,

- '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(소수점 이하는 올림)에 부담기초액(월)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'21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- 추진배경 :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
-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·납부
 - 제도 적용 : 2020년~(계속)
 - 신고·납부 : 2021년~(계속)
- 시행일 : (부담금 적용) 2020년 1월 1일, (신고·납부) 2021년 1월 1일

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

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,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(단, 일요일은 제외*)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.

*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

■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,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

■ 한편,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(휴일대체)할 수 있습니다.

-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*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.

* 1일 8시간 이내는 50% 가산,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% 가산

- 추진배경 :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
- 주요내용 :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(유급휴일 의무화)
- 시행일 : '20.1월 : 300인 이상 → '21.1월 : 30~299인 → '22.1월 : 5~29인

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

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.

-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(계약당사자)는 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.

- '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,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*지원대상(월 보수): '20년 215만원 미만 → '21년 220만원 미만

- 다만, '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(기가입자)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- 추진배경 :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
- 주요내용
 - (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)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,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% 지원
 - (근로자)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
 - *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(기 가입자) 지원 중단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「일자리 안정자금」 지원 지속

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



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.

-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,
 - 최저임금 인상(1.5%)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 -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,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.
 - *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·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
- 주요내용
 -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(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)
 - * (5인 미만) 월 7만원 지원, (5~30인 미만) 월 5만원 지원,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

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·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.

-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'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% 미만자'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.
 - * (최저임금적용제외)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(최저임금법 제7조)

■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, 버스, 택시(장애인콜택시 포함),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■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

- 추진배경 : 저임금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 신규 지원
- 주요내용
 - (지원대상)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% 미만자

대상

- (지 원 액)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
- 시행일 : 2021년 4월 1일 (시범사업 실시)

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

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'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'을 실시하는 경우에는

-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.
 - *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('20.6.9 공포, '20.12.10 시행)

■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제3항 ('20.12.10 시행)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품질 제고
- 주요내용 :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실시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

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.

-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(월 30만원)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.
 -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.
 - * 육아휴직 2, 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-3호 인센티브 신설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
- 주요내용



-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(1호 → 1~3호)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(1~3호)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직장어린이집 인건비·운영비 지원요건 완화

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·운영비·설치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.

■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,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
■ 이에,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·후견인·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.

■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근로자들의 출산·육아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·가정 양립을 지원
- 주요내용 :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'피보험자의 자녀'를 「영유아 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'로 변경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최저임금액 인상

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,720원으로 인상됩니다.

■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,760원,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,822,480원(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,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입니다.

■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,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.

■ 다만,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.

* (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)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, ②단순노무종사자(고용노동부장관

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)

■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,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'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'은 15%, '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'는 3%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.

* (예시)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, 상여금 272,810원($8,720\text{원} \times 208.57\text{시간} \times 15\%$), 복리후생비 54,562원($8,720\text{원} \times 208.57\text{시간} \times 3\%$)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

- 추진배경 :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
- 주요내용
 - 2021년 최저임금액: 시간급 8,720원
 -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: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5%, 복리후생비 3% 각 초과금액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"자녀양육비" 융자 신설

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

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"자녀양육비"를 신설합니다.

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·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, 1자녀당 연 500만원(총 한도 1,000만원)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■ 또한,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(前) 저소득 노동자,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→

(後) 저소득 노동자,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

- 추진배경 :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
(내용) 저소득 근로자①에게 의료비,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②로 융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
 - 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/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(단,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)
 - ② 연 1.5%
- (융자종목) 의료비, 장례비, 혼례비 등 총 9종



종류	의료·장례비	혼례비	부모요양비	자녀양육비	자녀학자금	임금감소 생계비	소액생계비	임금체불 생계비
한도	1,000만원	1,250만원	1,000만원 (1부모당 연 500)	1,000만원 (1자녀당 연 500)	1,000만원 (1자녀당 연 500)	1,000만원 한도 내 임금 감소액	200만원	1,000만원 한도 내 체불임금 범위

*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,000만원 한도

○ 주요내용

- (융자종목 추가) 총 8종 → 9종(『자녀양육비*』 신설)
*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
- (융자대상 확대)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

○ 시행일

(융자종목 추가) 2021년 1월 중

(융자대상 확대) 2020년 12월 8일 시행

대표이사의 "안전·보건에 관한 계획" 수립 및 이사회 보고·승인

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"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"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■ 의무대상은 「상법」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입니다.

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, 안전·보건관리 조직의 구성·인원 및 역할, 안전·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, 안전·보건에 관한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■ 안전보건계획이란, 「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」를 말함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

○ 추진배경 :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마련 유도

○ 주요내용

-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·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

-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

'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

- 현재 보험설계사, 고객센터기사, 택배기사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.
 - '21.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.
-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 - '21.7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, 이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.
 - ① 종사자의 질병·부상, 임신·출산·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
 -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
 -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
- 추진배경 :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
- 주요내용 :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, 육아·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
-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「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 조정」 시행

- 화재·폭발·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이 변경되었습니다.
- 따라서 개정된 규정량*이상으로 유해·위험물질을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유해·위험시설을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·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 - * PSM 규정량 조정(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):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(현행보다 하향 18종, 상향 18종, 현행과 동일 15종)
 - 또한 부식성 액체(염산, 황산, 암모니아수 등)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



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

- 개정된 규정량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,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 · 시행되며
-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(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)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
 - 추진배경 :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 · 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
 - 주요내용 :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(별표 13)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 (현행보다 하향(강화) 18종, 상향(완화) 18종, 현행과 동일 15종)
 - 시행일 : 상시근로자 5명 이상 '21.1.16~, 상시근로자 5명 미만 '21.7.16~

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

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는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였으나, '21년부터는 장해 판정일부 터 3년까지 확대됩니다.

-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,
 - 기존에는 훈련신청 시점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지급 하였으나, 이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부 터 3년 이내로 변경되어 훈련수당이 차등없이 지급됩니다.

- 산재 장해판정일부 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훈련 신청해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드립니다.

*(훈련기간) 산재 직업훈련 지원(수당·비용) 기간은 총 12개월, 훈련 횟수 2회

-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일 시행일 이후 산재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실업중인 산재장해인에 대한 취업안전망 강화
- 주요내용 : 산재 장해판정일부 터 3년 이내 언제든지 훈련받아도 최저임금 100% 보장
 - 현행 : 산재 장해판정일부 터 1년 이내(최저임금 100% 수준 내)
산재 장해판정일부 터 1년 경과 3년 이내(최저임금 50% 수준 내)
 - 개정 : 산재 장해판정일부 터 3년 이내(최저임금 100% 수준 내)
* 개정내용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
- 시행일 : 2021년 2월 1일